농업인 절반 이상 "10년 후 암울…기본소득 보장돼야"

미래 비관 53.2%…6년새 12.2%p ↑

농촌 생활수준 개선 체감 17.7% 그쳐

서삼석 "소득·농산물 가격 안정 최우선"

농업인 절반 이상이 농업의 미래를 비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소득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8일 발표한 '2026년 농업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53.2%로 조사됐다. 2020년 41.0%보다 12.2%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반면 '희망적'이라는 응답은 14.2%에 그쳤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미래 전망 사이의 괴리도 컸다. '농업이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60.7%로 과반을 차지했다. 농업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작 농업의 미래에는 기대를 걸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농촌 생활에 대한 체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5년 전보다 농촌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응답은 17.7%에 불과했다. 반면 '도시보다 농촌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76.9%로, 2020년 72.8%보다 4.1%p 높아졌다.

현재 직업에 만족한다는 농업인도 25.2%로 4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생활 분야별 만족도에서는 보건·의료가 5점 만점에 2.59점으로 6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았다.

농업인들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정책은 소득과 가격 안정이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농민 기본소득 보장'을 꼽은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5점 만점에 3.89점, 대상지역 확대가 3.64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격 보장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2.0%에 달했으며, 우선 적용 품목으로는 쌀이 69.6%로 가장 높았다.

주요 농정 현안에서도 농업인의 소득과 생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4%에 그친 반면, 가입에 앞서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은 63.2%에 달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보다 농산물 판매·유통 등 실질적인 경제사업 강화를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농협 개혁 과제 가운데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는 5점 만점에 3.93점으로 7개 과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합장 조합원 직선제 적용'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38.8%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 25.8%보다 13.0%p 높았다. 반면 '독립적인 농협 감사위원회 신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8.5%로 중요하다는 응답 29.5%보다 9.0%p 높았다.

농업인들이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보다는 농산물 판매와 유통 등 실제 소득과 직결되는 경제사업 강화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농지 전수조사 등 농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세대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20·30대에서는 50.8%가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70대 이상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41.6%로 필요하다는 응답 34.2%보다 높았다.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강화와 함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령 농업인의 현실과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서삼석 위원장은 "7년째 이어온 조사가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하다"며 "농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농민의 삶은 나아졌다고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의 미래를 비관하는 농민이 절반을 넘어선 현실을 정부와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농업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PTPP와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한 주요 농정 현안도 농업인의 삶과 소득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위원장은 2020년부터 매년 지역별 농민 비율을 반영해 전국 농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김진수 기자

전남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환자정보 유출'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최근 4년간 고용률 미달 부담금 37억"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지역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각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신 전남대병원장,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화정석 경상국립대병원장, 김해영 부산대병원장, 양종철 전북대병원장, 장원영 제주대병원장, 복수경 충남대병원장,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과 '환자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를 추궁하는 의원들 질책이 이어졌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남대병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최근 4년간 37억원으로 전국의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다"며 "앞장서서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유난히 장애인 고용에서는 민간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임상교수를 전남대병원은 3년 연속 강진의료원과 목포의료원에 정원 2명을 꽉 채워 파견해 좋은 평가를 받고도 추가 파견 요청에는 '정원이 묶여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취약한 사이버 보안 탓에 발생한 환자 정보 유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전남대병원 환자 298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됐다. 이거는 병원장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후 처음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고충 청취 기회도 마련됐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국립대 치과병원이 독립 법인화하지 못한 곳이 전남대와 전북대 딱 두 군데"라며 "어떤 게 걸림돌인가"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전남대병원 최대 현안인 새 병원 건립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연간 수도권 원정 진료 인구가 100만명, 소요 비용은 1조7천500억원에 달한다는 복지부 통계를 제시하며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봤을 때 '서울로 진료나 수술하러 안 가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치과병원 독립 법인화에 대해 "진료 실적이나 재정 건전성이 너무 열악해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법인화 기준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새 병원 건립에 필요한 건의 사항으로는 "예산 약 9천600억원 중 병원의 자부담이 50%가 넘는다"며 "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정부의 지원 비율에 변화가 좀 있고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정 진료의 사회적 비용을 해소할 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이라며 "예약할 때 보면 서울보다 지방이 예약하기가 더 어려운 아이러니가 좀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지방 국립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수도권行'

전진숙 "지역 정착 위한 교육시스템 마련"

지방 국립대 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직장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부터 지역의사 전형이 도입되는 만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의무복무, 수련환경 개선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지방 국립대 의대 졸업생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통해 근무지가 확인된 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졸업생은 317명이었다.

이 중 43.8%인 139명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2명, 인천 10명 순이다.

대학별 격차도 컸다. 부산대 의대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 비율은 23.2%, 경상국립대는 29.7%, 전남대는 3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강원대는 75%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대 55.6%, 충북대 53.8%, 충남대 50% 등 4개 대학에서는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의 경우 취업이 확인된 졸업생 50명 가운데 서울 11명, 경기 8명 등이 수도권에 자리 잡았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단순히 지역에서 의대생을 선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의무복무, 복무 이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배출된 지역의사를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의료법인, 공공보건의원 등과 연계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만 수련할 경우 복무 이후 진로가 지나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파견 경험을 보장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동수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주철현 "영농형태양광 주민 배당, 환원 인정"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오는 12월 '영농형태양광법'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주민참여협동조합의 조합원 배당을 주민 환원 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영농형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데 있다"며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에게 발전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발전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더라도 이를 주민 환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영농형태양광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